

# ‘공익 직불금’에 우는 농민 많다

### 실경작자도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 없으면 불가 김승남 “법·제도 보완해 구제방안 적극 마련해야”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와 별개로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실경작자이면서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121만9천 농업인에게 총 2조3천564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직불금 수령 농지면적은 112만8천ha로 전체 농지면적의 72%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에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추가되면서 과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금 대상에서 소외됐던 농업인들이 또 다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란 구체적으로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이라



는 것으로,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만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수령액이 낮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이나, 해당연도에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실경작하지 못했던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지급이 원천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은 실경작자가 아닌 ‘가짜농업인’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공익직불제 도입 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만

1천237건에 달하지만 농식품부는 사례별 민원관리도 안하는 등 억울하게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을 삭제하면 실경작자와 ‘가짜농업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농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현주소라며 “이는 농식품부가 얼마나 농지관리를 엉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지관리를 제대로 못한 농식품부의 잘못을 농업인이 책임질 수는 없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 전승공예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필요

### 이병훈 “무형문화재 판매액 1인 평균 20만원 이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승공예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구)이 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통기술 전승공예품의 전체 판매액은 1억5천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68명, 전승 교육사와 이수자를 모두 합하면 781명으로 결국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되어 민족의 전통과 얼을 드러내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공예, 전통기술 보유자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특히 공예 등 전통기술 보유



자의 경우는 공예품을 만들어도 홍보·유통체계 미비로 인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유자들에게 평생을 전통문화 계승에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같이 전승공예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를 위해서는 의민선물, 국제행사 참가기념품 등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승공예품과 전시·진열 등 인테리어에 적합한 전통공예품을 발굴하고 목록화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왼쪽부터)-추미애-이재명-박용진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與주자, 마지막 TV토론서도 대장동 공방

### “대장동, 큰 짐...대선 격정” vs “정부 실책으로 땅값 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5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다.

결선 진출을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는 ‘본선 직행’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총리 출신의 이 전 대표를 향해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론으로 맞붙을 뻔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문제 제기가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의 편을 든 반면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에 의혹 해명을 요구하면서 ‘이재명·추미

애 대 이낙연·박용진 후보간 대결’ 구도가 이날도 재연됐다.

우선 양강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 모두발언에서부터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며 “불안한 상태를 끌고 가며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돼 밤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토론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두고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 호재라고 할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이런 장처라도

만들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부정과 투기가 알려진 계기이자 제 성과와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부동산 가격 폭등론으로 역공을 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총리 하는 동안인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업자 이익이 3천억~4천억원 늘었다”며 “그 점은 총리님도 생각해보실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게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며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부당한 개발 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데, 자꾸 내부에 문제를 제기해 담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가 이후에도 거듭 “대장동 사업) 이익이 늘어난 건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 그렇다. 제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잘된 건 자기 공이고, 못된 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걸 반복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토론 때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말을 문재인 후보에게 했던 이 지사의 태도에 비하면 전 엄청나게 절제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한때 측근으로 알려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관련 직원 일부가 오염됐다고 하니 지휘관으로서 도의적 책임, 국민엔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도록 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혁과 책임을 엄정히 묻는 방식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해수부

### 윤재갑 “산하 기관 조정해 예산낭비 줄여야”

어업인이 낚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가 신설된 이후 예산과 조직은 각각 73%, 23%로 확대 되었지만 정작 어업인 수는 33%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년 해수부 신설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산하 공공기관은 2020년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해 6개가 신설 또는 확대돼 현재는 18개의 기관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해수부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농업인 수도 어업인에 비해 23배 많지만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율이 36%이지만 해수부는 5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제 몸집 키우기에 매진해 왔다”고 꼬집고 “단립한 산하 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野경선 당원투표율 50% 넘나...당심 ‘4강 선택’ 주목

국민의힘은 6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해 오는 8일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당원 투표율이다.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율이 45.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경선에서 이를 돌파할지 주목

된다.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보다 대선후보 경선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선에서의 당원 투표율은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50%를 돌파한다면 흥행 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6·11 전대에 참여한 기존 당원 28만 명 외에 8월 말까지 당비를 내고 2차 컷오프에 새로 참여하는 10만 명의 표심이다.

/연합뉴스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